

주간 통일정세

2015-30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대북전단 살포 비난…“무자비한 보복 타격 각오하라”(7/30,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30일 북한이 '전승절'로 기념하는 정전협정 체결일인 지난 27일 한 남한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이고 극악한 대결행위”라고 비난함.
 - 이어 “더욱이 격분을 자아내는 것은 이 자들이 평양의 밤하늘가에 축포가 터져 오르고 천만군민이 전승의 환희와 기쁨 속에 잠 못들던 그 시각을 부디 골라 뼈라 소동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함.
 - 또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혈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무차별적으로 단호히 징벌해 버릴 것”이라며 “우리 군대의 무자비한 보복타격이 임의의 시각에 분계선 상의 임의의 장소에서 개시될 수 있다”고 위협함.
- 북한 “남한, 8·15공동행사 무산시키려 ‘비정치화’ 타령”(8/1,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1일 논평에서 “8·15 공동행사의 '비정치화'는 그 어떤 타당성도 없는 한갓 꾀변”이라며 남한 당국이 6·15 공동행사에 이어 이번 행사도 무산시키기 위해 “심사 뒤틀린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남한 당국의) ‘순수한 사회문화 교류’니 ‘비정치적 행사’니 하는 말들을 뒤집어 보면 민족공동행사에 남측 단체들이 참가하지 못하게 ‘불허’하겠다는 소리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신문은 특히 “(남측의) ‘비정치화’ 타령에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시시껄렁한 ‘교류’나 하면서 체제 대결과 전쟁의 흥심을 실현해보겠다는 어리석은 흥심도 비껴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이어 “남조선 보수당국의 방해책동은 8·15 공동행사를 통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의 국면을 열어가려는 민족의지에 대한 우롱이고 도전”이라며 “남조선 보수당국이 발악해도 민족통일대회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성대히 진행될 것”이라고 호언함.

■ **북한, 김무성 대표 비난…“얼간망둥이들 대화 상대 아니다”(8/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대결광신자들은 대화상대로 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괴뢰들이 대화를 극성스럽게 외위대는 그 입으로 우리의 노선과 체제를 악의에 차서 헐뜯고 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자주와 존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얼간망둥이들과 어떻게 민족의 운명을 논하는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대결을 구하는 남조선괴뢰패당은 우리의 대화상대로 될 수 없다”고 강조함.
- 신문은 “우리가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키는 것은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갈 전략적 노선”이라고 주장하고 “괴뢰역적패당이 병진노선에 대해 시비질하며 못된 수작을 늘어놓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악랄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함.
- 북한은 “우리의 자주적 노선과 존엄 높은 체제에 감히 도전하는 자들과는 애당초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며 “남조선 괴뢰들은 대화 상대방을 함부로 헐뜯으며 대결에 광분한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북한, 서해 미사일 발사장 공사완료…발사준비 움직임 주목(7/28, 38노스)**

- ‘38노스’는 28일(이하 현지시간) 최근 촬영한 민간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올해 봄부터 진행된 서해 동창리 로켓 발사대 주변의 증·개축 공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힘.

- 38노스는 로켓 부품을 발사대로 운반하는 이동식 지원 플랫폼이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으며 이는 당초 예상했던 길이 24m, 넓이 30m, 높이 33m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알려짐.
 - 38노스는 “북한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즈음해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한국 국방부의 논평에도, 북한이 서해에서 장거리 우주발사체와 관련한 준비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는 없다”고 밝힘.
- “北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로켓 조립시설 없어”(7/2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9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북한의 서해 미사일 발사장에는 로켓 조립시설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함.
 -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면 평양 인근의 공장에서 개발한 로켓을 분리해서 기차나 차량으로 동창리까지 이송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송된 3단 로켓은 발사장으로 옮겨져 조립해 발사대에 세울 것”이라고 말함.
 - 동창리 발사장에는 로켓을 발사대까지 옮기는 레일이 깔렸으며, 발사장 지하에 이 레일을 자동으로 작동하는 장치를 갖춘 것으로 알려짐.
 - “北동창리 발사장에 덮개 설치 중”…미사일 발사 준비하나(8/2, 교도통신)
 - 북한이 서해에 인접한 미사일 발사대에 덮개를 씌우는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2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개·보수 작업이 끝난 발사대에 덮개가 설치되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이 밝힘.
 - 북한은 동창리 발사장으로 이어지는 철로의 플랫폼을 완전히 덮을 지붕을 만들고 있으며 덮개의 자세한 형태나 미사일 본체가 설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남북 사회 관계

- 산림 전문가들 방북...‘금강산 소나무’ 조사 착수(7/29, 연합뉴스)
 - 우리 산림 전문가들이 29일 누렇게 말라가고 있는 금강산 일대 소나무들의 병해충 실태 조사를 위해 방북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산림과학원과 수목보호협회 소속 산림 전문가들과 현대아산 관계자 등 8명이 29일 오전 9시40분께 동행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빠른 걸음으로 출경길에 올랐다고 뉴스는 전함.
 - 이번 공동조사는 지난 15일 북측이 현대아산을 통해 상당수의 금강산 소나무에서 보이는 이상 상태의 원인 파악과 해충 방제를 위한 조사를 제안하면서 이뤄졌음.

- 이희호 여사, 서해 직항로 통해 저가항공사로 방북(7/30, 연합뉴스)
 -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다음달 5일 방북시 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 비행기를 사용하며 서해직항로를 사용한다고 30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이 여사는 다음달 5일 오전 10시 김포공항에서 떠나며, 3박4일 일정을 마치고 8일 오전 11시 평양 순안국제공항서 다시 돌아올 예정으로 평양 체류시 북한 측과 합의한 대로 평양산원, 애육원, 아동병원, 묘향산을 방문할 예정임.
 - 숙소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2011년 조문 방문시 사용한 백화원초대소와 묘향산호텔로 정해졌으며 평양 방문시 전달할 선물은 이사장이 직접 뜯 털목도리와 의료·의약품 등이라고 뉴스는 전함.

- 남북 8·15 공동행사 추가 개성 실무접촉 무산(7/30, 연합뉴스)
 - 남북 민간단체가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8·15 남북 공동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개성에서의 31일 추가 실무접촉이 무산됐다고 30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광복 70돌, 6·15 공동선언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는 30일 대변인 성명에서 “북측 준비위원회가 서신을 통해 8·15 공동행사 준비와 관련해 31일로 예정된 개성 실무접촉 대신 팩스로 협의하자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힘.
 - 이어 “북은 서신에서 ‘남측 지역에서 험악하게 벌어지는 동족대결 소동 정세 속에서 과연 8·15 공동행사가 성사될 수 있겠는가’라며 ‘지금의 상황에서 개성에서 서로 마주앉는다고 해도 좋은 결실을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기했다”고 설명함.

- 北, 10월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불참 통보...사유 인박혀(8/2,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북한은 지난달 31일 '조선인민군 체육지도위원회' 명의로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CISM) 측에 전해왔다고 국방부가 2일 밝힘.

- 국방부 對北발언(북 핵시험과 장거리미사일발사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 관련 '미·일과의 군사적 결탁 강화를 목적으로 한 반공화국 대결소동의 연장'이라며 '싸드를 끌어들이길 흥계를 드러내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지역에 재앙을 몰아오고 있다'고 비난(7.28, 중앙통신·노동신문)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이란핵협상 타결 관련 對北발언(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계기 등)에 대해 '현실에 대한 판별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대결광신자가 아니고서는 내뱉을 수 없는 망발'이라고 비난 및 '핵보유국에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7.28, 중앙통신·민주조선)
- 이란 핵협상 타결 관련 우리 정부의 북핵 발언(북핵문제해결, 북핵 협상을 통해 타결 등)에 대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헛바닥을 놀려대는 철부지 애새끼의 망동'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남아있는 한 우리(北) 핵무력의 사명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7.29, 중앙통신 논평)
- '北인권백서 2015'를 거론 '박OO패당이 인권을 명분으로 탈북자들을 이용한 반공화국모략책동에 광분하고 있다'며 '회유와 기만, 강압으로 끌고간 주민들을 동족대결에 내몰고 있는 박OO패당은 인간의 탈을 쓴 인권유린 악마'라고 왜곡 비난(7.31, 중앙통신)
- 우리 정부의 남북회담 제의 관련 '대결정책의 근본적인 전환 없이 입으로만 뉘척대는 대화타령은 상대방에 대한 우롱이고 내외여론에 대한 기만'이라며 남북대화를 위해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실천행동으로 이행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8.1, 중앙통신·노동신문)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주중 北대사 "일방적 핵포기 대화 관심없어"...미국에 화살(7/28, 연합뉴스)
 -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는 28일 중국 베이징(北京) 북한 대사관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을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먼저 핵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논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함.

- 지 대사는 “대화가 열리지 못하는 기본 원인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있다”며 6자회담 등이 열리지 못하는 원인도 미국 탓으로 돌리는 한편, “미국이 우리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부각시키는 것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남조선에 끌어들이 아무 때나 우리나라와 주변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그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9월 열병식 참석을 겸한 방중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나로서는 통보해 줄만한 소식이 없다”며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으며 이란 핵협상 타결과 관련해서는 “자주적인 핵 활동권을 인정받고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장기간 노력을 통해 이란이 이룩한 성과로 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우리는 실정이 이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차별성을 강조함.
- 북 유엔차석대사, 10월 장거리미사일 발사 가능성 배제 않아(7/29, 연합뉴스)
 - 장일훈 차석대사는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북한대표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0월 로켓(장거리 미사일) 발사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10월 10일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임을 상기한 뒤 “대규모의 성대한 기념식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함.
 - 장 차석대사는 북한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억지와 압력에 대해 북한은 현대화되고, 확장되고, 강화된 핵무기로 대응할 것임을 과거에도 밝힌 바 있다”고 말함.
 - 북한 미국의 인신매매 최하등급 지정에 강력 반발 및 미국에 “합동군사연습 중단하면 대화 가능”(7/29,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세계적인 인신매매 대국인 미국이 주제 넘게도 우리의 인권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이며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함.
 - 또한 미국이 인권매매 보고서를 만든 것은 “힘으로 우리를 어쩔 수 없게 되자 우리의 제도를 헐뜯는 치졸한 방법으로 고립시켜보려는 계산”이라며 “미국의 적대의도가 노골화할 수록 우리의 의지는 천백배로 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함.
 - 이어 대변인은 “미국이 합동군사연습 같은 적대행위를 그만두고 다른 길을 갈 결단을 내린다면 대화도 가능해지고 많은 문제들이 풀릴 수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대변인은 최근 남한 등을 방문한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무부 6자회담 특사가 북한의 불참으로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한 데 대해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 대변인은 또 "조선반도에서 대화가 없이 긴장만 계속 격화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특히 합동군사연습 때문"이라며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의 중지로 '대화외지'의 진정성을 보이기 전에는 정세격화의 악순환만 계속되고 대화도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함.

-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 "위성 권리 있다"...로켓 발사 시사(7/30, 자유아시아방송)
 - 3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서세평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위성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은 주권 국가의 권리"라고 주장함.
 - 서세평 대사는 서해 동창리 로켓 발사장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증축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언급한 채 증축공사의 완전 마무리 여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미국, 합동군사연습 중지로 핵문제 해결외지 보여라"(8/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일 '정세악화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조선반도 정세격화의 악순환이 지속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합동군사연습을 골자로 하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있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조선반도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합동군사연습 중지와 같은 실지행동으로 관계개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함.
 - 통신은 "미국의 비핵화 대화 타령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고 있는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기 위한 기만술책에 불과하다"며 "미국이 침략적 본성을 가리우고 정세악화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비난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특이사항 없음.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북한, 유엔서 미국과 투표대결…“반대 투표 ‘최다’”(7/29,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지난해 유엔에서 실시한 투표에서 미국 정부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모든 사안에 반대 의견을 보였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함.
 - 미국 국무부가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14 유엔 투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은 유엔 총회가 실시한 총 87건의 투표 가운데 53건에서 미국과 반대 의견을 보여 192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반대 투표 최다를 차지함.
 - 특히 북한은 미국 정부가 국가 이익과 직접 연관됐다고 분류한 13건의 주요 안전에 대해 미국과 반대로 투표한 유일한 유엔 회원국이라고 미국 국무부가 보고함.

자. 기타 국가

- 싱가포르 “북한 무기거래 지원 혐의 선박회사 조사중”(7/29, 자유아시아방송)
 - 29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싱가포르 당국이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를 지원한 혐의로 미국의 대북제재 명단에 오른 자국 선박회사 세나트에 대해 자체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함.
 - 이에 앞서 유엔은 지난해 9월 세나트에 서면질의서를 보내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OMMC)와 연계 의혹에 관한 해명 등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고 그는 공개함.
 - 싱가포르 정부 역시 세나트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과의 거래에 관한 정보는 국내법상 보고 대상이라는 점을 서면으로 알렸으나 세나트 측은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 지원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음.

- 제30차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입소식, 7월 27일 현지진행 및 北·러시아·나이지리아·베트남·탄자니아·파키스탄·중국·브라질 소년야영단과 해외동포 소년야영단 참가(7.27, 중앙통신·평양방송)
- 이집트 농업 및 관개근로자 총동맹 대표단·일본 오카야마현 일-조우호 대표단, 7월 27일 각각 평양 출발(7.27, 중앙통신·평양방송)
- 美日의 ‘가쓰라-태프트 밀약’ 체결(1905.7.29) 110주년을 맞아 이 밀약은 ‘조선민족의 운명을 흥정판에 올려놓고 제멋대로 유린농락한 날강도적인 협정’이라고 비난하며 ‘미일의 침략적인 야합으로 얻을 것은 파멸뿐’이라고 주장(7.29, 중앙통신)
- 일본 시민들의 ‘안전보장관련법안’ 반대 시위를 거론하며 ‘일본 국민들이 안전보장관련법안을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이 법안이 나라의 운명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전쟁법안이기 때문’이라며 ‘일본 반동들은 평화를 원하는 민심을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7.29, 중앙통신·민주조선)
- 北, 멕시코 주재 北 대사에 김형길 임명(7.29, 중앙통신·중앙방송)
-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7월 30일 세계장기연맹 위원장(키르싼 일름지노프) 일행과 담화 및 ‘김정은 선물’ 접수(7.30, 중앙통신·중앙방송)
- 강석주(黨 비서), 7월 30일 베트남신문 ‘연진’ 대표단과 담화(7.30, 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수용(외무상), 7월 30일 離任 주북 나이지리아 대사(은위페 알렉산더)와 담화(7.30, 중앙통신)
- 美 테러지원국 명단 발표 관련 ‘미국이 양키식 기준에 준하여 발표하는 테러지원국 명단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기 위한 마수에 불과하다’며 ‘국제사회의 미국 징벌 및 테러정책 저지’ 촉구(7.31, 중앙통신·노동신문)
- 日 ‘안전보장관련법안’ 중의원의회 통과 관련 ‘해외에서 자위대의 군사행동을

- 허용함으로써 미군과 동맹국들과의 군사작전에 함께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일본의 해외침략은 시간문제로 남았다'고 비난(8.1, 중앙통신·노동신문)
- 미국의 '정전협정체결(7.27)' 62주년 행사(7.27, '장진호' 전투 기념비 기공식 등)를 "패전을 승전으로 둔갑시키는 광대놀음"이라며 "우리(北)의 승리는 대를 이어 계속될 것" 호언(8.2, 중앙통신·노동신문)
 - 美 정계인사 등 '北-美대화 전망'에 대해 "우리(北)는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北-美간 비핵화를 논하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핵포기 不可 및 北-美 대화실패 미국 책임' 주장(8.2, 중앙통신·민주조선)
 - 리수용(외무상), 8월 2일 마케도니아 외무상에게 '마케도니아 국경절' 축전(8.2, 중앙통신)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김정은, 전승절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7/2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 62주년인 27일 0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함.
 - 이번 참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서흥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노광철 상장, 조남진 중장, 럽철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등이 참석함.
 - 중앙통신은 "참가자들은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반제반미 대결전에서 최후 승리를 이룩해 위대한 수령님들의 평생의 염원이요 우리 민족의 최대 숙원인 조국통일 대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자 말 불타는 맹세를 다짐했다"고 분위기를 전함.
- 북한 김정은, 정전협정일 맞아 한국전쟁 '열사묘' 참배(7/2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 62주년인 27일 군부 지도자들을 대동하고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를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 새 세대들이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사상 정신적 무기로 확고히 틀어쥐고 반제반미 대결전과 강성국가 건설의 승리를 위한 총결사전에서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함.
 - 이날 김정은 제1위원장의 참전열사묘 참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서홍찬 상장, 조남진 중장, 럽철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등이 참석함.
- 북한 김정은, 중국에 있던 화해 손짓…중공군 묘에 화환(7/28,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7일 정전협정 62주년을 기념해 북한 내에 조성된 중국인민지원군 전사자 묘지에 화환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이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묘에 헌화한 것은 201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60주년 이후 2년만이며 당시 김 제1위원장은 이곳을 직접 찾았다고 연합뉴스는 설명함.
 - 중국인민지원군열사능원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공군 전사자들의 유해가 안장된 곳이다마오쩌둥(毛澤東)의 아들 마오안잉(毛岸英)도 이곳에 묻혔다고 뉴스는 덧붙임.
- 북한 김정은, ‘청봉악단’ 창단…리설주 역할 주목(7/28,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청봉악단’ 창단 소식을 전하면서 금관악기 위주의 경음악단이며 왕재산예술단 연주자들이 주축이 됐으며,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해 창설됐다는 점을 강조함.
 - 앞서 2012년 7월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함께 모란봉악단이 탄생했고, 북한은 이 악단이 김정일 시대의 보천보전자악단을 계승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
 - 모란봉악단은 창단 초기 과격적인 옷차림과 서방 음악을 선보이며 북한관객그룹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곧 군복을 입은 ‘항일유격대 나팔수’로 변신해 군인과 주요 정치적 행사에서 공연하고 있으며 리설주는 인민내무군협주단과 은하수관현악단 성악가 출신으로 모란봉악단의 운영과 활동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 김정은, 전국노병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7/3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 62주년을 앞둔 지난 25일 열린 제4차 전국노병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함.
 - 이날 촬영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과 항일빨치산 출신 리을설·황순희·김철만·박경숙·리영숙 등이 참석했으며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리용무·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최영립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태종수 함경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도 자리를 함께했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 공군 전투비행술 경기대회…“김정은, 전용기 타고 사열”(7/30, 조선중앙통신)
 - 선중앙통신은 30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5’가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훌륭히 개건 확장된 갈마비행장에서 성대히 진행됐다”고 보도함.
 - 중앙통신은 “오전 8시30분 김정은 동지께서 타신 전용기 '참매-1'호기가 갈마비행장 상공을 날며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구분대들에 대한 사열비행을 했다”고 소개함.
 - 앞서 리영길 총참모장은 개막사를 통해 이번 전투비행술 경기대회는 “모든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을 높은 비행술을 소유한 일당백의 만능 비행사들로 준비시키려는 의도에 따라 진행되는 훈련경기”라고 설명함.
 - 이날 대회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서홍찬 상장, 조경철 보위사령관, 김영철 정찰총국장, 오금철 부총참모장, 리용주 해군사령관, 최영호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김락겸 전략군사령관 등이 수행함.

- 북한 김정은, 신축 평양양로원 시찰…“멋쟁이 건축물”(8/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오수용·김기남 노동당 비서, 리재일 당제1부부장, 김여정 당 부부장과 함께 새로 건설한 평양양로원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연로자들에게 아무런 근심걱정이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는 궁궐같은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니 정말 기쁘다”면서 “연로자들을 늘

관심하고 잘 돌봐줌으로써 연로자 보호정책을 철저히, 정확히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특히 양로원이 “주체성, 민족성을 살리며 민족건축형식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의도가 완전무결하면서도 최상 수준에서 실현된 ‘멋쟁이 건축물’이라며 건설을 맡은 군인건설자 등을 치하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北리수용, ARF 외교장관회의 참석 공식 통보(7/29, 연합뉴스)
 - 북한이 다음 달 초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에 리수용 외무상의 참석을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함.
 - 북측은 참석 대상자로 리수용 외무상과 외무성 국제기구국의 국장급 인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따라 이번 ARF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남북 및 북 중간 접촉 여부가 주목됨.
- 최영호 북한 공군사령관 대장으로 승진(7/30, 노동신문, 연합뉴스)
 - 노동신문이 30일 1면에 보도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 현지도 사진에서 최 사령관이 별 4개가 달린 대장 견장을 달고 수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함.
 - 최 사령관은 지난달 22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여성 초음속전투기 비행사 훈련 참관시 수행할 때까지만 해도 상장으로 호명됐었으며 2014년 12월 리병철 후임으로 공군 사령관에 오르면서 상장 계급을 달았음.
 - 이후 약 10차례 김정은 제1위원장의 군 부대 및 훈련 시찰에 동행했으며, 지난 2월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진행된 인민군 결의대회에서 연설하기도 했다고 뉴스는 덧붙임.
- 북한 김영남, 이집트 제2수에즈운하 개통식 참석(7/29,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제2 수에즈 운하’개통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집트를 방문한다고 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北 김정은 경호요원 탑승 추정 경비행기, 원산서 추락(7/31, 연합뉴스)
 - 북한 강원도 원산 지역에서 이달 중순 경비행기 1대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31일 보도함.
 - 이 경비행기의 기종과 탑승 인원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난 29일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열린 북한 공군 전투비행술 경기대회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됨.
 - 군 관계자는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비행기에는 김정은의 원산 도착을 준비하는 경호 준비팀 중 일부가 탑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군 중요 인물들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고 뉴스는 전함.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한, '전승절' 띄우기…수령 결사옹위 강조(7/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1면 전면 사설을 통해 “7월 27일은 김일성 동지의 영도 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미제 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 온 날”이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함.
 - 북한의 한국전쟁 참전 노병들도 노동신문 3면에 발표한 호소문에서 “원수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정신, 증오와 복수심이 변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장마당 세대의 경각심을 촉구함.
 - 이들은 특히 “김정은 원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우리 노병들은 잘 안다”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만을 믿고 따르고 목숨으로 사수하라고 젊은 세대들에게 호소했다.
- 북한 최룡해, 80대 노병들에게 김정은에 대한 충성 주문(7/31,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31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제4차 전국노병대회에 참가한

노병들에게 선물을 보내주는 은정을 베풀었다”면서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30일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함.

- 최룡해 비서는 선물 전달사에서 “모든 노병들이 김정은 원수님을 삶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일편단심 충정의 한길만을 걸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주문함.
- 그는 또 “노병들이 원수님의 사상과 영도를 높이 받들고 후대들을 1950년대의 수령 결사옹위 정신, 조국수호 정신, 대중적 영웅주의 정신의 체현자들로 키워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다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북한, 광복 70주년 맞아 김일성 선전 본격화(8/1, 노동신문, 조선중앙TV)

- 노동신문 2면 전체에 김일성 주석의 컬러 사진 11장을 특집 형식으로 다뤘으며, 신문에는 항일 투쟁 당시의 청년 김일성부터 집권 후 보천보·대흥단 ‘혁명전적지’를 돌아보는 중년의 김일성, 항일 빨치산 동료들을 만나는 노년의 김일성까지 사진이 실림.
- 신문은 이어 3면에 ‘선군혁명의 개척자이신 아버지 수령님의 조국해방 업적 천만년 빛나리’라는 제목으로 주요 기사를 배치하며 김 주석을 미화함.
- 특히 김 주석이 세운 ‘불멸의 선군 전통’은 “희세의 영장 김정일 장군님”과 “또 한 분의 절세의 애국자인 김정은 동지”까지 이어진다고 3대 세습의 정당성과 체제 수호를 강조함.
- 조선중앙TV는 ‘전승의 역사 영원하리-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항일 무장투쟁 노선 제시 참관기’와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칭송하여 항일혁명 투쟁시기 중국 동북지방에서 창작된 시 가사작품’을 방영했다.
- 또 ‘연속 기행, 백두산 지구 혁명 전적지를 찾아서-청봉 숙영지’ 프로그램도 내보내며 광복이 김 주석의 업적이라고 선전함.

- 김영남·박봉주 등 당과 국가 책임일꾼들과 우당위원장·평양시내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금수산태양궁전 참배(7.27,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박봉주 등 당과 국가·군대 책임일꾼들과 당·무력·정권기관·내각·평양시내 근로자 등, 대성산혁명열사릉·애국열사릉·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에 헌화(7.27, 중앙통신·중앙방송)
- 공훈국가합창단 경축공연, 황병서·박영식·리영길 등 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제4차 전국노병대회 참가자 등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진행 (7.28, 중앙통신·중앙방송)
- 평양 대동강변에서 23:00시 축포 발사(7.27, 중앙방송·중앙통신)

- 인민군 장병·각계층 근로자·청소년학생들의 만수대언덕 등 전국 각지 김일성·김정일 동상 등 헌화·참배 및 경축공연·무도회 진행과 전쟁노병들과 상봉모임 등 “전승절을 뜻깊게 경축” 선전(7.27, 중앙통신)
- 남녀평등권법령 발표('46.7.30) 69돌 즈음 ‘덕성이야기’모임, 7월 28일 김정순(여맹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여성회관에서 진행(7.28, 중앙통신)
- 김정은 저작(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 건설을 다그치자) 발표('12.7.26) 3주년을 즈음하여 ‘저작은 김정일애국주의로 승리할 데 대한 인민군 장병들과 근로자들에게 천백배의 용기를 안겨주고 투쟁의 활력을 부여준 힘있는 원동력이었다’고 강조(7.29,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일성이 1950년대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를 안아온 것은 조국과 민족, 인류 앞에 쌓아올린 영원불멸할 업적’이라며 ‘승리의 7·27이 있어 오늘의 조선이 있고 사회주의위업의 창창한 미래가 있다’고 주장(7.29,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은 黨 제1비서, 제4차 전국노병대회 참가자들에게 ‘선물’ 전달(7.31, 중앙방송)
- ‘남녀평등권법령’ 발표(7.30) 69주년 즈음 ‘여성들의 혁명·건설에서 떨쳐온 전투적 노정’ 치하 및 ‘김정은 두리에 일심단결 하여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여성의 혁명적 기개와 전투적 위력을 힘있게 떨칠 것’ 독려(7.30, 중앙통신·노동신문)
- 모자이크벽화(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준공식, 여러 단위들에서 진행(7.31, 중앙통신)
- 제4차 전국노병대회 참가자들의 ‘호소문’ 호응 평안북도·황해남도·함경북도·함경남도·나선시 군중대회, 7월 31일과 8월 1일 각각 진행(8.1, 중앙통신)
- 정전협정체결(7.27) 62주년 경축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평양에서 진행(8.1, 중앙통신)
- 「광복(8.15)」 70주년 즈음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붉은기 이어달리기” 출발모임, 8월 2일 리창길(「청년동맹」 조선인민군총 위원장/보고)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삼지연대기념비 김일성 동상앞 교양마당) 및 동·서해지구로 나뉘어 「판문점」 향발(8.2, 중앙통신·중앙방송)
- 제4차 전국노병대회 참가자들 「호소문」 호응 평안남도·황해북도·강원도·자강도·양강도·남포시 군중대회, 8월 2일 각각 진행(8.2, 중앙통신·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북한, 원산-금강산지역 주요 명승지 소개 ‘눈길’(4/15, 김일성종합대학학보 8/2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2일 입수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5년 2호(4월15일 발행)는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의 관광자원 분포의 특징’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원산과 금강산 일대의 주요 명승지를 다룸.

- 금강산 국제관광지대의 경우 외금강, 내금강, 해금강 지역을 비롯해 표훈사, 정양사, 금장암사자탑, 모덕암, 서산대사비 등이 대표적인 관광자원이라고 소개하며 눈여겨봐야 할 점들을 안내함.
- 논문은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관광지는 관광자원의 분포가 자연 관광자원이나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그 어느 하나에만 치중돼 있다”며 “그러나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는 관광자원의 분포가 다양하고 종합적인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함.
- 그러면서 “원산-금강산 관광자원 분포의 특징을 과학적으로 밝히는 것은 관광업을 빨리 발전시키는 데 중요하다”며 “모든 일꾼은 원산-금강산 관광자원 분포의 특징을 정확히 인식하고 경제개발구 개발사업을 적극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나. 주요 조치

- “북한, 묘향산 인근에 김정은 네번째 전용 활주로 건설”(7/30,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30일 미국 상업위성이 지난 7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에서 북서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전용 활주로는 들어섰다”고 보도함.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헬기 착륙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별장이 있기 때문에 전용 활주로는 헬기 착륙장은 김씨 일가 또는 특권층만이 이용하는 시설일 것”으로 판단함.
 - 멜빈 연구원은 또 “이번 위성사진을 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알려진 것 이상으로 묘향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이동할 때 자동차나 기차보다 비행기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방송은 전함.
- 북한, 평양 외교단지에 야외 체육시설 건설(7/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대동강구역 문수대사관지구에 농구, 배구, 테니스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장과 관람석, 오락시설을 갖춘 야외 체육장이 새로 들어섰다”고 전함.
 - 이날 준공식에는 북한 외교단사업총국 직원과 북한 주재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심국룡 외교단사업총국장은 “외국의 벗들이

야외 체육장에서 체력을 단련하면서 나라들 사이의 친선관계 발전에 적극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 9월 국제골프대회 개최…여성들 첫 참가(7/30, 자유아시아방송)
 - 영국 루핀여행사의 딜런 해리스 대표는 3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9월7일 열리는 대회에 처음으로 여성이 참가 신청을 했다”며 “미국에서 1명, 호주에서 2명 등 3명의 여성 참가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평양골프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미국, 영국, 중국,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스위스, 호주 등 10여 개국에서 18명의 외국인들이 참가 신청을 한 상태며 북한 거주 외국인 2명 정도를 포함 외국인 참가자는 20명 내외라고 전해짐.
 - 해리스 대표는 “여행사는 골프대회를 위한 연습과 호텔, 식사 등을 포함한 여행 상품을 기간과 항공 이용 여부에 따라 1천159달러(135만원)부터 다양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소개함.

다. 경제 상황

- 북한 주민들 식량 배급량 한달새 40% 줄어(7/29,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9일 비정부기구인 ACAPS가 세계 각국의 식량 사정과 정치, 인권상황 등을 기준으로 국가별 위기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주민 1인당 하루 식량 배급량이 한달 전보다 40%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북한 당국이 이달 중순부터 주민 1인당 하루 식량 배급량을 250g으로 줄였다고 밝힘.
 - 앤 우트네 ACAPS 정보분석관은 "북한은 아직도 주민 180만명이 외부의 식량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북한 내 식량 안보 위기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한편, "자연재해에 취약한 북한이 가뭄, 홍수, 폭우 등을 주기적으로 겪고 있다"며 북한의 경작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함.

라. 대외 경제 관계

- EU, 북한 농업생산성 증대사업에 6억원 지원(7/29,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9일 EU가 북한에서 농업생산성 증대사업을 벌이고 있는 독일 유기농업연구소에 50만달러를 지원했다고 보도함.
 - EU 원조개발협력청 대변인실은 “북한 주민들에게 고기와 우유 등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해 영양을 개선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설명함.
 - 독일 유기농업연구소는 지난 2011년에도 EU 지원을 받아 북한에서 3년간 친환경 유기물을 이용한 곡물과 채소 경작법을 전수한 바 있으며 유기농업연구소 관계자는 “비료가 부족한 조건에서 유기농업 기술을 이용했을 때 농업 생산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함.

- 북한, 외국인 투자자 경제개발구 토지이용권 매매 허용(6월호, 정치법률연구; 8/2,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입수한 북한 학술지 ‘정치법률연구’ 6월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에 규제된 투자 및 투자보호의 중요내용’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의하면, 북한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경제개발구에서 임대한 토지 이용권을 매매하거나 증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함.
 - 이 논문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개발구에서 투자자들에게 부여한 권리, 투자 재산, 합법적인 소득은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토지의 경우 토지를 임대한 투자자가 해당 토지의 이용권을 가지게 되며, 그것을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증여, 상속할 수 있고 저장까지 잡힐 수 있으며, 화폐, 외국통화로 표시된 유가증권, 귀금속 같은 화폐재산, 원료, 자재, 반제품, 토지·건물, 배 등 현물 재산과 저작권, 소유권, 기술 비결 등 투자자의 재산도 법적 보호를 받음.
 - 투자자가 경제개발구에서 얻은 노동소득과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증여소득과 함께 경제개발구 밖에서 얻은 합법적인 소득까지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고 논문은 설명함.
 - 또 경제개발구법은 ‘국가가 투자자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몰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했으나, 다만 자연재해 등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해 국가가 투자자의 재산을 임시로 이용할 경우 사전에 통지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그 가치를 제때에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내용이 덧붙임.
 - 외국인 투자자들이 특히 우려하는 ‘신변 안전’과 관련해서도 ‘투자자의 신변

안전을 우리 공화국의 법에 따라 보호하고,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구속하거나 체포하지 않으며 거주 장소를 수색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전국 발명 및 새기술전람회 개막식, 7월 28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7.28,중앙통신)
- 전국섬유종이부문 과학기술발표회, 7월 29일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에서 진행(7.29,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조선국제체육여행사('97.1월 설립)는 '체육관광을 위주로 하는 여러 형태의 관광들과 친절한 봉사로 관광객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다'고 선전(7.29,중앙통신)
- 개성애국피복공장, 7월말 현재 연간 인민경제계획 128% 초과 완수 보도(7.30,중앙방송)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북한 억류 임현수 목사 기자회견...“국가전복음모 혐의인정”(7/30, 조선중앙통신)
 - 지난 1월 북한에 입국한 뒤 억류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60) 목사가 30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체제 전복 활동 등의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임 목사는 탈북자 지원활동에도 참여했다며 “1996년 몽골에서 미국 대사를 만나 한 해 500여 명의 탈북자를 도주시키는 문제를 모의했으며, 탈북자 유도책동을 하고 있는 테니스 김이라는 미국 국적의 남조선 사람으로부터 GPS 기재를 받아 조선족 탈북거간국에게 넘겨줬다”고 털어냈다고 통신은 전함.
 - 임 목사는 “온 민족 앞에 나의 형언할 수 없는 대역죄를 머리 숙여 깊이깊이 사죄한다”면서 북한에서 “미국과 남조선 위정자들, 서방세계의 악선전과

뿌리깊은 반공화국 적대이념으로 하여 볼 수 없었던 참세상, 참다운 진실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된 것이 기쁘다”고 덧붙임.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북한 여성들, 패션에 눈떠…‘짜퉁 명품’도 인기(7/28,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8일 중국의 자유기고가 량루하이(梁露海)가 최근 영국의 패션잡지 ‘데이즈드 앤 컨퓨즈드’에 기고한 ‘북한 패션의 발흥’이란 제목의 글과 사진을 소개함.
 - 량씨는 북한 여성들이 단체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여성들이 외국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과 ‘프라다’ 핸드백 모조품을 들고 있다고 설명함.
 - 량씨가 공개한 사진 속 여성들의 옷과 핸드백은 색이 화려하고 디자인도 다양했으며 굽 높이가 10cm가 넘어 보이는 하이힐을 신은 여성도 있었으며 북한 여성들 옷차림의 변화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를 따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추측함.

- 문학예술출판사, 올해 혁명전설총서·혁명일화시집·장편소설 등 30종의 도서 새로 출판 및 ‘근로자·청소년들의 문화정서생활 풍부화에 도움’ 선전(7.30, 중앙통신)
-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 과학기술지식과 상식을 주는 과학영화들 창작(7.31, 중앙통신)
- 조선노동당출판사, 새로운 선전화들 창작(7.31, 중앙통신)
- 北 여자 다이빙선수 김국향(16세),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첫 금메달 획득소식 보도(7.31, 중앙통신)
- 北, 7·8월 해양체육월간을 맞으며 각지 학교들에서 해양체육활동에 큰 힘을 넣고 있다고 선전(7.31, 중앙통신)
- 北 여자축구팀, 2015 동아시아컵(중국)에서 일본에 4:2 승리(8.2, 중앙통신)
- 2015년 국제탁구연맹 세계순회경기대회 평양공개탁구경기대회, 8월 2일 종료 및 경기결과 보도(8.2, 중앙통신)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美 7공군사령관, “北 핵위협 지속…정전협정 지켜야”(7/27, 연합뉴스)
 - 테런스 오사너시 유엔군 부사령관 겸 주한미군 7공군 사령관은 판문점에서 열린 정전협정 62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주목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전협정을 지켜야 한다고 밝힘.
 - 그는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무기 확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은 이 지역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의) 최근 도발은 우리의 존재와 정전협정의 유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상기시켜준다”고 말함.

- 美 정보당국, “北, 10월 노동당창건일 즈음 도발 가능성”(7/28, 연합뉴스)
 - 美 정보당국은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즈음해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개발 상황이 진전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함.
 - 美 정보당국 핵심관계자는 이날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오는 10월 노동당 창당 기념일에 즈음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함.
 - 이 관계자는 북한이 어떤 유형의 도발을 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각에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이 거론됨.

- 주중 北대사, “일방적 핵 포기 대화 관심 없어”…미국에 화살(7/28, 연합뉴스)
 -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는 28일 중국 베이징 북한 대사관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은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며 핵 동결·포기를 논하는 대화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 6자회담 불발 원인을 미국 탓으로 돌림.
 - 지 대사는 북한은 “일방적으로 먼저 핵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논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으로 한반도 정세가 격화되고 있다”며 미국을 비난함.

- 북한이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한다면 6자회담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분석됨.
- 주중 北대사 회견 의도는…“美中 공조 간극 벌리기”(7/28, 연합뉴스)
 -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가 베이징 북한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시점이 이란 핵협상이 타결된 직후에 이루어졌고, 한·미·일과 중국이 이를 계기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오는 때라는 점이 주목됨.
 - 이란 핵협상을 함께 타결한 미국과 중국은 이 성과를 북핵 문제 해결의 모멘텀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공통적으로 드러냈고, 양국은 6자회담 재개의 조건과 대북 압박 수위 등에 대해 견해차가 있지만 북한의 핵개발 불용과 비핵화 등에 대해선 동의함.
 -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회견의 목적은 중국과 한·미·일 등의 북핵 공조의 간극을 벌려 놓고, 중국 측에 “핵개발은 미국 때문”이란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분석이 있음.
- 北 유엔차석대사, 10월 장거리미사일 발사 가능성 배제 않아(7/29, 연합뉴스)
 -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장일훈 차석대사는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북한대표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10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시사함.
 - 장일훈 차석대사는 ‘10월 로켓(장거리 미사일) 발사설’에 대한 질문에 “대규모의 성대한 기념식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고, “미국의 군사적 억지와 압력에 대해 북한은 현대화되고, 확장되고, 강화된 핵무기로 대응할 것임을 과거에도 밝힌 바 있다”고 발언함.
 - 서방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위장된’ 탄도미사일 발사로 보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새로운 제재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
- WSJ, “북한 김정은, 카다피처럼 되기 싫어 핵협상 안 한다”(7/30, 연합뉴스)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알 카다피처럼 파멸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핵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북한 핵 협상이 어려운 것은 대북 경제 제재의 효과가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 이 신문은 “김정은이 권좌에 오른 것은 카다피가 죽은 지 2개월 뒤였다”면서 시민혁명이 일어나 국민의 손에 죽은 카다피와 같은 운명을 맞지 않기 위해 핵 협상에 나서지 않는 것이라고 밝힘.
 - 이 신문은 북한이 핵 협상에 나서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하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덧붙임.
- 국방부, 北 반박…“한·미 훈련은 대화 전제조건 될 수 없다”(7/30, 연합뉴스)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미국에 대화의 조건으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 한미 연합훈련은 대화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밝힘.
 - 김 대변인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것”이라며 (훈련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덧붙임.
- 북한, 이란과 차별화 시도…대북제재 강화해야(7/31, 연합뉴스)
 - 데이비드 스트로브 美 스탠퍼드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 에번스 리비어 전 美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 등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주요국 대사들을 통해 핵포기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은 이란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분석함.
 -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정권’의 생존과 보존을 위협하는 조치가 북한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주장함.
 - 이들 전문가는 6자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인 견해를 밝히면서도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협상을 위한 문을 열어두면서 북한에 대한 온갖 종류의 압박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미국의 현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냄.
- 한·미·일, “도발억지·비핵화 위해 대북 압박·대화 노력 병행”(7/31,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일본은 도쿄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북 압박과 대화 노력을 병행한다는데 뜻을 같이 함.

- 김건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시드니 사일러 美 국무부 북핵 특사,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참사관은 한·미·일이 북한의 추가적 도발을 억지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협상의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강력한 압박과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병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함.
 - 특히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을 맞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도발에는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한·미·일 3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함.
- 北동창리 발사장에 덮개 설치 중, 미사일 발사 준비하나(8/01, 연합뉴스)
 - 북한이 서해에 인접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개·보수 작업이 끝난 미사일 발사대에 덮개를 설치하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은 밝힘.
 - 발사대 설치에 이어 덮개 작업까지 확인됨에 따라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을 쏠 것이라는 관측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음.
 - 덮개 설치에 따라 발사 준비 작업의 진행 상황이나 미사일의 형태 등을 미국이 파악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나. 미·북 관계

- 이란 다음은 북한…미국, 인권 고리로 대북 압박(7/27, 연합뉴스)
 - 이란 핵협상 타결 후 미국은 인권 문제를 앞세움으로써 북한을 더욱 고립시켜 마지막 과제인 북핵 이슈를 풀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인 윌리엄 뉴컴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드러내는 것은 북한을 수세로 몰아넣을 수 있다. 핵무기와 달리 인권침해는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반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함.
 - 이는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는 북한 정권을 상대로 이란과 똑같은 해법보다는 ‘약한 고리’인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을 협상 무대로 끌어내겠다는 것이 오바마 정부의 전략으로 보임.
- 美 국무부, 13년째 ‘북한 인신매매 최악’ 지정(7/27, 연합뉴스)
 - 美 국무부는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 활동과 관련해 최하 등급인 3등급(Tier 3)으로 다시 지정하였는데, 북한은 미국이나 국제기구로부터 이미 각종 제재를 받고

있어 이 등급에 따른 인적지원 및 금융거래 제재의 실질적인 효과는 없음.

- 보고서는 북한이 남성, 여성, 아동의 강제노동과 성매매의 온산지(Source Country)라며 “5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국외 북한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강제노동 환경임을 시사하는 조건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함.

다. 중·북 관계

- 김정은 제1위원장의 중지원군에 대한 감사는 우회적인 지원 요청(7/27, 연합뉴스)
 - 중국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장톈구이 교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중국의 인민지원군에 경의를 표한 것은 100년만의 가뭄에 시달리는 북한이 우회적인 방식으로 외부에 원조를 요청한 것일 수 있다고 밝힘.
 - 또한 장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중국과의 관계 완화를 겨냥해 의도적으로 행한 것일 수 있다고도 분석함.
- 시진핑 주석 선양 방문-김정은 ‘화환’…북·중 관계 전기 맞나(7/28, 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6~19일 지린(吉林)성 일대를 돌아본지 8일 만인 27일 랴오닝성 성도인 선양을 방문하였는데, 시 주석의 이러한 잇단 동북지역 집중방문 자체가 북한에 보내는 신호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랴오닝성 일대 대북소식통들은 “중국과 북한이 비록 역대 최악의 관계에 처했으나 혈맹으로 불리는 양국의 지난 역사를 볼 때 관계 개선의 여지는 여전히 있다고 본다”며 “시 주석의 선양 방문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관계개선 메시지”라고 전함.
 - 또한 대북소식통들은 “시 주석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자 김 위원장이 이에 화답하는 형국”이라며 “양국 정부 간 훈풍이 불 기미가 있으나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함.
- 시진핑 주석, 선양 전격방문…대북 화해메시지 관심(7/28, 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린성 일대를 둘러본 지 불과 9일 만에 중국 동북지역 최대도시이자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랴오닝성 선양을 27일 방문하여 ‘일대일로’의 핵심인 ‘대외개방’과 ‘국제협력’을 강조함.

- 시 주석의 이러한 행보는 극히 이례적이며, 이 지역과 접경한 북한에 대해 최근의 불편한 양국 관계를 개선하자는 메시지를 거듭 보내는 것이라는 해석이 있음.
- 北中 교역 13% 감소…1~6월 對北 원유 공급 중단(7/31, 연합뉴스)
 - 니혼게이자 신문은 올해 상반기 북한과 중국의 교역량은 154억 위안(약 2조 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 감소하는 한편, 중국의 원유 수출이 전혀 없었다고 보도함.
 - 이 신문은 지난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양국 관계가 악화한 것이 교역량 감소로 이어졌으며, 중국의 원유 수출 중단은 중국이 에너지 부족 등을 명분으로 대북 원유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논평함.
 -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최근 북·중 관계 악화 속에 중국이 원유 수출을 중단하고 북한에 현금(경화) 결제도 요구, 교역량이 크게 주는 등 경제관계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함.

라. 일·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러·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기타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매케인 국방위원장, “日인사 만날 때마다 진솔히 사과하라고 한다”(7/28, 연합뉴스)
 - 방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존 매케인 美 상원 국방위원장을 만나

“한·미·일 삼각관계가 안보에서 중요한데, 일본의 과거사 인식 문제가 협력 진전에 상당한 장애가 되는 만큼 종전 70주년에 일본이 진솔하게 사과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힘.

- 이에 대해 매케인 위원장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인 다음달 15일에 일본이 침략 피해를 본 나라들에 진솔하게 사과할 것을 일본 측에게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고 답함.
- 매케인 위원장은 6·25 전쟁을 준비태세가 나뉘었던 주요한 사례로 들고 있음을 거론하면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현재) 한미 연합군의 준비 태세는 양호하다”고 덧붙임.

■ 방미 김무성 대표, “한·미 동맹 대체 불가능…중국보다 미국”(7/28, 연합뉴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한 이후 미국 정부와 의회, 학계 등 조야의 인사들을 두루 만나는 자리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함.
- 김 대표는 27일 오후 우드로윌슨센터 오찬 연설에서 우리 정부의 대미·대중 관계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전면적인 관계이고, 한·중 관계는 분야별 일부의 관계”라며 차별성을 부각시킴.
- 이는 한·중 관계는 북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개별 사안과 경제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된 협력관계이지만, 한·미 관계는 정치·군사·경제·문화 등 전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동맹관계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됨.

■ 탄저균 실무단 내달 6일 美 오산기지 현장조사…언론에도 공개(7/29, 연합뉴스)

-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진상 규명에 나선 한·미 합동실무단은 국방부 청사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6일 사고 현장인 주한미군 오산기지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고 이후에는 이례적으로 같은 장소를 언론에도 공개할 것으로 밝힘.
- 국방부는 “합동실무단은 다음달 6일 오산 미군기지에 있는 생물검사실을 방문해 탄저균 샘플 반입 과정과 반입 이후 조치 및 폐기 절차 등 사고 전반의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함.
- 주한미군 기지의 생물검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 주한미군 측이 생물검사실을 극히 이례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그만큼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한 의혹을 확실하게 떨쳐내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TPP 협상 타결되면 한국은…완전 발효 후 후발참여 가능성(7/30, 연합뉴스)
 - 지난 28일(현지 시간)부터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열리고 있는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TPP) 협상 당사국 간 각료회의에서 TPP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 정부도 TPP 참여 여부를 정해야 함.
 -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TPP가 발효될 경우, 명목 국내총생산(GDP) 26조6천억 달러, 무역규모 10조1천800억 달러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최대 경제통합체로 부상하게 되는데, 한국이 여기서 제외된다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
 - 그러나 한국의 TPP 가입은 농수산물 등 민감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과 후발주자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입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점을 낳을 것으로 예측되며,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 가중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카딘 美 상원의원, 한미원자력협정 승인결의안 제출(7/30, 연합뉴스)
 - 카딘 의원은 29일(이하 현지시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한미원자력협정)을 승인하자는 내용의 결의안 (S.J.Res. 20)을 제출함.
 - 카딘 의원은 “미국과 한국은 오랫동안 안전하고 평화적인 민간 원자력 협력의 긍정적 역사를 만들어 왔다”며 “이 협정이 두 나라의 지속적인 유대와 필수적 협력관계를 반영하는 만큼 의회에서 승인돼야 한다”고 설명함.
 - 새 한미원자력협정은 앞으로 미국 의회의 심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연말이나 내년 초 발효될 전망이며, 발효되면 그동안에 묶여 있던 우라늄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을 통한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재처리)이 가능해짐.

나. 한·중 관계

- 중국, 9월 열병식에 박대통령 참석 고대…불참 땀 행사 빛바래(7/27, 연합뉴스)
 - 중국 당국은 9월 베이징에서 개최하는 제2차 대전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기를 고대하고 있으며, 불참 때는 행사의 빛이 바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음.
 - 스인홍 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박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으면 열병식이

지니는 외교적 취지가 달성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박 대통령이 미국의 압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함.

- 현재까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 정상들만 열병식 참석을 확인해 옴. 많은 외국 정상들은 민족주의와 반일본 메시지가 기저에 깔린 열병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다. 한·일 관계

- 미쓰비시, 韓中 강제노역에 시각차 “징용과 전쟁포로는 달라”(7/27, 연합뉴스)
 - 미군 포로에 사죄하고, 중국인 노동자에는 보상을 추진 중인 일본 미쓰비시 머티리얼 사외이사 오카모토 유키오는 산케이 신문에 실은 기고문에 강제노동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소송에 대해 양국에 대한 입장을 설명함.
 - 그는 “한국이 주장하는 ‘징용공(徵用工·강제노역 피해자)’ 문제는 전쟁 포로 문제와 상당히 성질이 다르다”고 밝히면서, “일본으로 데려온 중국인 노동자의 사례는 법적 정리는 다르지만, 전쟁 포로와 유사하다”고 말함.
 - 이는 미쓰비시가 미군 전쟁포로 문제와 중국인 노동자 문제를 비슷하게 보고 있음을 시사함.
- 외교부, “日 자민당 위안부 왜곡, 심각 우려…즉각 중단해야”(7/28, 연합뉴스)
 - 정부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을 인정한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뜻을 담은 문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역사적 진실왜곡 시도의 중단을 촉구함.
 - 외교부는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고노 담화 훼손을 시도한 데 이어 이제는 집권당 일부 의원들까지 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함.
 -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집·이송·관리 등의 강제성은 국제사회가 이미 명백히 판정을 내린 역사적 사실인바 이 문제에 대한 역사적 진실과 국제사회의 엄정한 평가는 어떤 시도로도 결코 바뀔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함.

- **日 집권당, “성노예, 강제 연행·노동은 오해…제대로 반론해야”(7/28, 연합뉴스)**
 - 일본 집권 자민당 ‘일본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명위원회(이하 특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관한 국제사회의 오해를 풀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제안서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함.
 - 제안서는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이 1993년 고노담화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강제 연행이 있었다고 인정한 발언은 ‘국제사회에 사실에 반하는 인식을 확산했다’고 규정했고, 국제사회가 일본군 위안부를 성 노예라고 규정하는 것은 ‘일본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익을 해친다’고 평가함.
 - 특위는 위안부 강제 연행 등 잘못된 사실, 오해 등으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가 이에 반론하거나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서구 학자의 영향력을 빌려 일본 정부의 견해를 알리는 방안도 제시함.

- **일본인 41%, “日 공격당하면 비폭력으로 저항”...“싸울 것” 29%(7/29,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여론조사 결과 만일 일본이 공격당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41%가 ‘비폭력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무기를 들고 싸운다’(29%)는 다음으로 많았다고 보도함.
 - 또한 이번 조사에서 헌법을 그대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60%, 바뀌어야 한다는 응답은 32%로 각각 집계됨.
 - 이는 교전권을 부정한 헌법 9조 수정을 희망하는 아베 정권과 일반 여론의 괴리를 보여주는 조사결과로 풀이됨.

- **日 공립중학교 역사·사회 ‘우익교과서’ 채택 이어져(7/30, 연합뉴스)**
 - 오사카부 시조나와테시 등 일본 시교육위원회들은 우익 성향으로 평가받는 이쿠호샤(育鵬社)의 교재를 중학교 역사 및 공민(사회) 교과서로 선정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등 日 공립 중학교에서 우익 성향의 역사·사회 교과서 채택이 이어지고 있음.
 - 문부과학성 집계에 따르면 4년 전 각 교육위원회에서 이뤄진 교과서 선정 결과 현재 이쿠호샤 교과서의 채택률은 역사 3.9%, 공민 4.2%이고, 선정된 교과서는 내년 봄부터 4년간 사용됨.

- 윤병세 장관, “獨 과거반성 교과서…동북아서도 위업 이뤄져야”(7/30,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바르샤바 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된 ‘폴란드-독일 화해경험 공유 학술세미나’에서 과거 나치에 의해 비극을 겪었던 폴란드에 대한 독일의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자 치유 노력을 강조함.
 - 윤 장관은 “동북아에서도 이런 역사적 위업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함.
 - 윤 장관은 이날 일본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지만 역사를 직시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 주체는 과거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분명한 역사인식 표명을 회피하는 일본 아베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됨.
- 日, 해외 무기업체 인수 허용도 검토(8/02,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국외 무기제조업체 매수를 ‘엄격하게 억제’한다는 방침을 유지했으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판단한다’는 쪽으로 방침을 전환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국외 무기제조업체 인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이대로라면 일본 방위산업체의 국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관련 산업이 방위뿐만 아니라 산업의 측면에서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미·중 관계

- 중국, 남중국해상 인공섬 건설로 심각한 해양오염 초래(7/27, 연합뉴스)
 -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26일 중국이 필리핀 인근 남중국해상의 인공섬을 건설함으로써 잘못된 주권을 만들고 환경체계를 심하게 손상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경고함.
 - 해리스 사령관은 중국의 간척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환경 영향 문제가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면서, “중국의 이런 파괴적인 행위는 태평양 상의 가장 중요한 환초 체계 가운데 한 곳을 영원히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함.

- 중국 남중국해서 대규모 실전훈련…美견제에 맞대응(7/27, 연합뉴스)
 -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영유권 분쟁해역인 남중국해에서 함정 100여척과 군용기 수십대, 정보화 작전 병력, 제2포병부대 소속 미사일 발사부대 등을 대거 동원한 대규모 실전 훈련을 실시함.
 - 훈련 책임자는 “(이 훈련이) 기존의 대항전 가운데 육·해·공을 망라한 공간적 범위로는 가장 큰 규모”라고 말했으며, 남해함대 지휘관은 훈련 종료 후, “해군의 신형 무기의 실제 작전능력을 점검하고 부대의 연합 작전능력을 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함.
 - 중국군이 국지전에 대비해 대규모 훈련을 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중국의 행보는 미국과 일본의 동중국해, 남중국해 공세에 대응해 군사력을 과시하는 ‘무력시위’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됨.

- 중국 언론, “오바마 아프리카 방문은 중국 견제용”(7/27, 연합뉴스)
 - 중국 관영 언론들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에 대해 ‘중국 견제용’, ‘아프리카 대륙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등의 비판적 시각을 보임.
 -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오바마의 아프리카 방문 목적이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시키려는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아프리카 대륙을 열강의 다툼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임.

- 중국 해군 함대 규모 2030년 세계 2위…전문인력은 부족(7/28, 연합뉴스)
 -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캐나다의 ‘칸와 디펜스리뷰’를 인용, 중국이 이때까지 현대식 함정규모를 기준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큰 함대를 보유할 것이라고 전망.
 - 칸와 디펜스리뷰는 특히 중국이 내년까지 차세대 이지스함 052D형 미사일 구축함 최소 12대와 052A형 다목적 호위함 22대를 보유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중국이 이후 자체 건조한 항공모함 2척을 포함해 다른 최신 함정을 보유해 전체 함정규모가 50만(누계)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함.
 - 그러나 첨단 함정과 무기가 늘어남에도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이 중국과의 군사교류를 꺼리고 부패로 인해 많은 인재들이 대접을 받지 못해 첨단무기들을 다룰 해군 전문 인력의 부족 현상이 한층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시진핑 주석, 9월 미국방문…‘신형 대국관계’ 시험대 올린다(7/29, 연합뉴스)
 - 추이토펬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28일 미국 워싱턴 대사관저에서 열린 중국군 건군 88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해 시 주석의 방미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개략적인 방문 일정을 밝혔는데, 이로써 ‘신형 대국관계’가 시험대에 오를 예정임.
 - 추이 대사는 “올해가 유엔 창립 70주년이자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이기도 해서 각국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여러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시 주석 역시 참석해야 한다”면서 “이와 동시에 미국 국민방문 일정도 잘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추이 대사는 또한 “중·미 양국은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이 원만한 성공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신형 대국관계의 구축이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함.

- 2020년 아태지역 중국 미사일전력 미국 넘어설 수도(7/30, 연합뉴스)
 - 미 하원 군사위 소속 국방통인 랜디 포브스 의원은 ‘아시아중시 정책 :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중국 군사력의 영향’이란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중국 미사일 전력이 2020년이면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도 미국을 넘어설 수 있다고 29일(현지시간) 주장함.
 - 포브스 의원은 중국 군함 건조의 빠른 증가세와 미국 잠수함의 감소를 우려하며, “일부 전문가들은 그로부터 10년 뒤인 2030년에는 ‘전력 구조’의 관점에서 중국과 미국이 적어도 양적으로 필적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함.

- 中 국방부, “미국, 남중국해 군사화” 비판(7/31, 연합뉴스)
 - 양위쥬 中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남중국해에 군함과 군용기를 파견해 대중 저공정찰을 시행하고, 군사동맹과 군사력 배치를 강화하는 등 미국이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를 군사화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함.
 - 그는 “중국은 미국의 남중국해에서의 군사화 추진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미국의 이런 행동은 ‘미국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비판함.

- 양 대변인은 또 “미국은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중국의 ‘군사위협론’을 마음대로 왜곡해 선전함으로써 중국과 주변국 관계를 충돌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함.
- 미국, 인사처 해킹에 중국보복 검토…묘책 없어 고심(8/02, 연합뉴스)
 -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美정부가 미국 연방인사관리처(OPM) 전산시스템 해킹사건과 관련, 중국에 대해 보복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묘책’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함.
 - 이번 해킹의 규모나 의도로 볼 때 특단의 맞대응이 필요하며, 해커들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게 미국 관리들의 인식이면서도, 미국은 이런 대응이 중국의 또 다른 대미 보복을 부르며 양국 관계의 악화로 확산하는 것은 바라지 않고 있음.
 - NYT에 따르면 지금까지 경제 제재, 해킹 관련자 기소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었지만, 보복성이나 실효성의 문제 등으로 어느 것도 선택되지 않았고, 오바마 대통령도 ‘더 창의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짐.

바. 미·일 관계

- 혼다 미 의원, 일본에 “역사교과서 바꾸지 마라”(7/29, 연합뉴스)
 - 마이크 혼다 의원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레이번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위안부 결의안 채택 8주년 기념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정부를 향해 역사교과서를 바꾸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함.
 - 미국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H.R. 121) 채택을 주도한 혼다 의원은 “독일에서는 (유대인) 강제수용소가 없었다고 말하는 일은 위법”이라며 일본 정부가 군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함.
 - 미국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H.R. 121) 채택을 주도한 혼다 의원은 연설 도중 한국어로 ‘성노예’라고도 말하면서 군위안부 문제가 “노예행위였을 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언급함.
- 미 국무부 “일본군 위안부는 끔찍하고 흉악한 인권침해”(7/31, 연합뉴스)
 - 미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 ‘여성을 민간업자가

모집해' 등의 표현을 쓰며 군위안부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취지의 제안서가 마련된 데 대해 일본이 군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행위가 “끔찍하고 흉악한 인권침해(terrible, egregious violation of human rights)”라고 재확인함.

- 특히 국무부는 군위안부를 “제2차 세계대전 도중 일본군에 의한 성적(性的) 목적의 여성 인신매매”라고 규정하며 “이는 미국 정부가 여러 번 언급한 내용”이라고 강조함.
- 미 국무부는 “미국 정부는 일본에 지속적으로 이(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다른 과거사 문제를 이웃(국가)과의 더 강한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접근하도록 권장해 왔다”고 밝힘.

■ 위키리크스, “美 NSA, 일본 장관·대기업도 감청”(7/31, 연합뉴스)

- 위키리크스는 ‘타깃이 된 도쿄’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NSA가 2006년 9월부터 1년간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1기 내각의 장관들과 일본은행 총재, 대기업을 감청했다고 폭로함.
- 감청은 미국 및 유럽연합 국가와의 외교 전략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농산물 수출과 무역분쟁, 기후변화, 핵 및 에너지 정책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도 감청 대상이었고, 감청 내용에는 아베 총리의 관저에서 이뤄진 비공개 브리핑 내용도 포함됨.
- 줄리안 어산지 위키리크스 설립자는 “NSA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 어느 정도를 말해야 할지 몰래 걱정하는 일본 정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읽는다는 것도 알 수 있다”고 지적함.

■ 하와이 TPP 각료회의 폐막…“상당한 진전에도 최종 타결 못해”(8/01, 연합뉴스)

- 미국의 마이클 프로먼 美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일본의 아마리 아키라 TPP담당자를 비롯한 12개 당사국의 통상·무역장관들은 28일부터 나흘간 하와이 마우이 섬 웨스틴 호텔에서 마라톤협상을 벌여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나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함.
- 프로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TPP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또 “앞으로 제한된 몇 가지 현안들을 놓고 계속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다음 TPP 각료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음.

- 12개 당사국 대표들은 다자와 양자 협상을 벌여 규범과 시장접근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미국·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 5개국 간에 낙농품 시장 개방, 자동차 교역, 생물의약품(신약특허) 자료보호기간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림.
- 美 해병대 F35 전투기, 2017년 日배치...첫 국외투입(8/02, 연합뉴스)
 -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 가운데 해병대용 모델인 B형 기종 10대를 2017년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에 있는 미 해병대 기지에 배치될 것임.
 - 일본 자위대도 공군용 F35 A형 기종을 도입하기로 했으나 이 기종은 2016년 7월 무렵에나 초기운용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으면, 또 해군용으로 제작돼 항공모함에 탑재할 수 있는 F35 C형 기종은 2018년 2월에 초기운용능력을 획득할 것임.

사. 미·러 관계

- 美 ‘민주주의진흥재단’ 러시아 내 활동 금지(7/29, 연합뉴스)
 - 러시아가 자국에서 활동해온 미국의 ‘민주주의진흥재단(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을 헌정 질서와 국방 및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단체의 활동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으로 규정함.
 - 러시아 검찰 공보실은 “NED가 러시아의 영리 및 비영리 기구들을 이용해 선거 결과 무효화 운동, 정부 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위한 정치적 활동, 러시아군의 권위 실추를 위한 활동 등을 벌여왔다”고 지적함.
 - 1983년 설립된 NED는 미국 의회의 자금 지원을 받아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체도를 발전·강화 시키는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구이며, 러시아 내에서도 여러 NGO와 사회단체 등을 지원하며 민주주의 진흥 지원 활동을 펼쳐 옴.

아. 중·일 관계

- 중국-일본 해경선 센키쿠서 한때 대치...긴장고조(7/30, 연합뉴스)
 - 중국 해경선 2척이 28일 오전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한 순찰에 나서자 일본이 맞대응해 저지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일본 순시선은 중국 측 선박을 향해 “일본 영해에서 나가라”고 소리쳤고 중국 해경선은 중국어와 일본어로 “귀국의 선박이 우리 영해에 들어온 것이므로 즉시 떠나라”고 맞대응한 것으로 보도됨.
- 양국 순시선은 물리적 충돌까지 빚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수위로 신경전을 벌이며 대치함.

자. 중·러 관계

- 푸틴 대통령, 9월 방중 때 중국 서부행 가스공급 계약 체결 유력(7/29, 연합뉴스)
 -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공보수석)는 28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및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 참석차 방중할 때 가스 공급 계약서가 체결될 수 있다고 밝힘.
 - 페스코프는 “꼭 정상 방문에 맞추려고 애쓰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상 방문이 계약서 서명을 위한 좋은 계기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때까지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면 서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함.
 - 지난 5월 러시아 국영가스 회사 가스프롬과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중국석유-CNPC)은 서부노선 가스관을 통해 연 300억m³의 천연가스를 30년 동안 공급하기 위한 기본조건들을 담은 협정에 서명함. 이는 주요 자원 수출국인 러시아가 서방과의 갈등으로 유럽으로의 가스수출이 줄어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임.

차.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한 농아인들, 세계농아대회 참석…터키 방문(7/28, 미국의소리)
 - 세계농아인연맹(World Federation of the Deaf)의 테리 라일리 이사는 북한 농아인들이 제17차 세계농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터키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 세계농아인연맹의 북한 연락관인 로버트 그룬드 대표도 북한 농아인 4명과 통역관 2명 등 6명이 이번 대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 터키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에서 28일부터 닷새 동안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 미국, 북한을 포함해 세계 여러 나라 농아인들과 그 가족, 통역관, 정부 관리, 장애인 특수교육자 등이 참석함.
 - ‘인류의 다양성 증진(Strengthening Human Diversity)’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리사 카피니엔 세계농아인연맹 명예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1백 10여 개 강연이 진행됨.
 - 강연 주제는 농아인들의 인권과 교육, 보건, 문화, 기술 등 다양하며, ‘농아인 아이들을 위한 수화전자책 제작’, ‘재난 시 청각 장애인 지원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임.
 - 특히 북한 농아인들을 이끌고 참석한 그룬드 세계농아인연맹 북한 연락관은 북한의 농아 실태와 북한에서의 장애인 지원 사업에 대해 강연을 할 예정임.
 - 그룬드 대표는 강연이 국제 수화를 통해 진행된다며, 수화 통역관이 함께 동행해 북한 농아인들도 무리 없이 강연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 농아인들이 해외에서 열리는 세계농아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농아인 3명 등 6명의 북한 대표단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제16차 세계농아대회에 참석했음.
 - 이들은 당시 핀란드농아인협회의 주선으로 핀란드 국제개발부 세르파 파테로 장관을 면담하고 세계농아인협회 콜린 앨런 회장과 화상 대화도 나눴음.
- “북한 주민들 식량 배급량 한달 새 40% 줄어”(7/29, 연합뉴스)
 - 북한 주민 1인당 하루 식량 배급량이 한달 전보다 40% 줄어든 것으로 보임.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9일 비정부기구인 ACAPS가 세계 각국의 식량

사정과 정치, 인권상황 등을 기준으로 국가별 위기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음.

-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북한 당국이 이달 중순부터 주민 1인당 하루 식량 배급량을 250g으로 줄였다고 밝혔음.
- 이 수치는 지난 6월의 1인당 하루 식량 배급량 410g과 비교하면 40%나 줄어든 것임.
- 앤 우트네 ACAPS 정보분석관은 “북한은 아직도 주민 180만 명이 외부의 식량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북한 내 식량 안보 위기의 심각성을 지적했음.
- 그는 이어 “자연재해에 취약한 북한이 가뭄, 홍수, 폭우 등을 주기적으로 겪고 있다”며 북한의 경작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음.
- 그는 또 “북한의 폐쇄성 때문에 인도주의 단체나 직원이 자유롭게 지원 대상 마을에 갈 수도 없고, 지원 사업을 감시·평가하는 데 제한이 생기는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큰 제약”이라고 우려했음.

■ 북 노동단련대, 간부주택 건설에 동원(7/29,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간부들이 직권을 남용해 노동단련대 수감자들을 집짓기와 장식공사 등 사사로운 일에 동원해 비난을 받고 있음.
- 평안북도 국경지방의 한 소식통은 “간부들이 직권을 이용해 개인사택(사저) 짓기에 단련대들을 동원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음.
- 권력을 쥔 간부들이 노동단련대 수감자들을 동원하는 관행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최근 간부들 속에서 단독주택을 화려하게 꾸미는 바람이 불면서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임.
- 이에 수감자들은 ‘사회적 교양대상자’라는 불명예 때문에 가족들조차 불만을 터놓지 못하고 있음.
- 이 소식통은 “단련대들은 주로 보안서와 검찰소 관료들의 집짓기에 동원되는데, 군 보안서 부부장은 수감자 수십 명을 동원해 불과 한 달 만에 집을 다 지었다”고 말했음.
- 단련대 사건을 담당하는 보안서와 검찰기관 간부들이 “아침에 몇 명 보내주라고 단련대에 전화하면 즉시 동원되는데, 마치 노예처럼 수감자들을 부리고 있다”고 소식통은 폭로했음.
- 단련대 수감자들도 간부사택 짓기에 동원되면 때로는 담배와 먹을거리도 얻을 수 있고, 더욱이 사건을 담당하는 보안원들에게 잘 보이면 조기 출소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은근히 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음.

- 수감자들은 감독관의 철저한 감시 하에 노동하기 때문에 일 능률도 높아 간부들 속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쓸 수 있는 ‘예비노동력’으로 통하고 있음.
 - 중국 료녕성 지방에 친척방문 온 또 다른 여행자도 “직장에 나가봐야 먹을 것도 주지 않기 때문에 남자들은 직장에 빠지고 장사에 뛰어드는데, 이런 사람들은 한두 달 정도 노동단련대에 처해진다”고 말했음.
 - 최근 북한 전역에서 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맞아 다양한 치적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노동단련대 수용자들은 이런 곳에 동원되지 않고, 보안서 내 구류시설이나 아파트 공사장에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북한, 미국의 인신매매 최하등급 지정에 강력 반발(7/29, 연합뉴스)
- 북한은 29일 미국 국무부가 ‘2015년 인신매매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 등급 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 “참을 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세계적인 인신매매 대국인 미국이 주제 넘게도 우리의 인권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이며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비난했음.
 -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인권매매 보고서를 만든 것은 “힘으로 우리를 어쩔 수 없게 되자 우리의 제도를 헐뜯는 치졸한 방법으로 고립시켜보려는 계산”이라며 “미국의 적대의도가 노골화할수록 우리의 의지는 천백배로 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미국 국무부는 지난 27일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 활동과 관련해 최하 등급인 3등급(Tier 3)으로 지정했으며, 북한이 3등급에 속한 것은 2003년 이후 13년째임.

2. 북한인권

- “러 적십자, 북 강제노동피해자 보호”(7/28, 자유아시아방송)
 - 러시아 적십자사가 2013년 4월 개소한 인신매매·강제노동 피해자 보호소에 북한 노동자가 수용됐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음.
 - 국무부가 27일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2015 TIP report)에 따르면

상트 페테르부르크 지방 정부(St. Petersburg municipal government)가 부지를 제공하고 해외 자금지원으로 문을 연 이 보호소에 수용됐던 35명 중 북한 노동자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보고서는 북한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베트남, 나이지리아, 르완다, 시리아, 소말리아, 우크라이나의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보호소에서 있었다고 설명했다.
- 이와 관련, 러시아 적십자사 관계자는 어느바 없다고 28일 북한 노동자 보호 여부를 묻는 질의에 “관련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음.
-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원과 이들이 현재도 보호소에 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음.
-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이 북-러 양국 정부 간 계약 하에 러시아 극동 지역의 벌목 현장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에 매년 2만여 명의 북한 주민들을 보내고 있다고 연방 이민국을 인용했음.

■ “유엔 대북 지원과 인권 연계 중요”(7/28,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정책자문을 담당한 바 있는 크리스틴 정(Christine Chung) 씨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지난달 개소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음.
- 정 씨는 지난 27일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기고한 글(Moving Forward on North Korean Human Rights)에서 유엔의 모든 대북지원활동이 ‘인권우선정책(Rights Up Front Initiative)’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 씨는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이 같은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북한이 참혹한 인권유린을 부인하는 대신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수집한 북한 인권 유린 관련 정보를 향후 ‘유엔과 북한 정부 간 협력을 위한 전략적 틀(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 and the Government of DPRK)’ 보고서에 반영하는 등 북한에서 대규모 인권유린이 자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임.
- 유엔인권사무소가 북한이 향후 인권대화를 원할 경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첫 접촉 상대로 여길 수 있도록 그의 위상을 높이는 지원활동을 해야한다고 정 씨는 덧붙였다.

- 지난해 말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개선 압박에 북한이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사상 첫 면담을 하고 그의 방북 초청을 제안한 바 있다는 것임.
 - 정 씨는 또 유엔인권사무소가 향후 북한의 인권 관련 법이나 정책에 대한 기술적 지원 요청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 반면 유엔인권사무소는 1950년대와 1960년대 북한 정권의 기독교 탄압이 국제법상 대량학살죄에 해당하는지,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이 인신매매나 노예제도에 비견되는지 등 북한 인권 유린 실태 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것도 제안했음.
 - 정 씨는 지난해 말에도 유럽연합이 북한과의 인권 대화를 재개하는 한편, 모든 대북 지원활동에 인권을 앞세우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 유엔 북인권사무소 “북 인권침해 모니터링 지원”(7/29, 데일리안)
- 타렉 쉐니티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부대표가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보고서를 펴내는 시민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음.
 - 타렉 쉐니티 부대표는 29일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주한영국대사관, 비자발적실종반대 아시아연합이 공동주최한 ‘강제실종에 관한 국제회의: 북한/한국을 위한 교훈’이라는 제하의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유엔 사무소는 인권침해 감시 보고서를 펴내는 단체, 관련기관들의 인권침해 모니터링, 기록, 보고서 작성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음.
 - 쉐니티 부대표는 “아직 사무실이 정식으로 문을 열지는 않았지만 몇 주 후 정식으로 사무실이 문을 열 때까지 다른 여러 방법으로 (인권단체들과) 연락할 것”이라면서 “각종 인권침해와 관련된 고발을 수렴하고 강제실종실무그룹에 해당 사안이 고발 요건이 되는지 조언 및 검토를 해줄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지역, 특히 북한에 관한 정보 부족의 경우에도 (사무소가)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 “유엔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과 활용방법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것이며 그것이 앞으로 사무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 쉐니티 부대표에 따르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아직 정식으로 문을 연 상황이 아니며, 현재 타렉 쉐니티 부대표를 포함한 사무소 인력 4명이 한국에 들어와 정식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해 있음.

- “러시아 北노동자, 월급 상납 불만으로 이탈 늘어”(7/29, 데일리NK)
 - 최근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의 노임 착취와 열악한 환경에 대한 불만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전해졌음.
 - 특히 지난 5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러시아 방문 이후 러시아 당국이 이탈한 북한 노동자들을 묵인해주거나 체포돼도 북한측에 인계하지 않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음.
 - 러시아 현지 소식통은 29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월 800~1000달러씩 벌고 있으나 월급의 대부분을 외화별이 등 충성자금명목으로 강제징수당하고 있다”면서 “또 같은 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는 러시아인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를 받고 있는데 대한 불만으로 사업소를 이탈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 이어 소식통은 “5월에도 건설사업소에 나와 있던 북한 노동자 몇 명이 사업소를 이탈해 러시아 치타시 부근에 있는 한 기업에서 노동을 하다 러시아 경찰에 단속만 됐지만 이들은 무사했다”면서 “그래선지 최근 사업소를 이탈하려고 하는 북한 주민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다만 소식통은 “대부분 북한 노동자들이 독신으로 와 있기 때문에 탈북하게 되는 경우 가족들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조별로 외부작업을 나가는 사람들도 ‘가족이 아니면 지금이라도 도망치고 싶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일 집권시기에는 별목을 목적으로 파견된 북한 주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건축 및 건설을 목적으로 한 노동자들의 파견이 대폭 늘었음.
 - 러시아 치타시에도 철산회사와 낙원회사가 있으며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대략 300여 명이며 이들 중 이탈하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임.
 - 소식통은 “지난 5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이후로 러시아 경찰들은 북한 노동자가 탈출해도 체포하지 않고 못 본 척 하거나 일부 도와주기도 한다”며 “도망친 주민을 체포해달라는 북한 대사관의 요구를 들어주던 지난시기와 다르다”고 전했다.
 - 소식통은 “이전에는 사업소에서 도망간 북한 주민을 체포해달라고 요청만 하면 러시아 경찰이 잡아들였기 때문에 이탈한 북한 노동자 대부분은 먼 지역으로

가든가 아니면 산속에 숨어서 살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경찰에게 단속을 당해도 북한에 넘겨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때문에 소식통은 “대신 해당 사업소마다 보위지도원들의 감시가 더 강화되고 주중 생활총화도 엄격히 진행되고 있다”도 말했다.

■ “北보안원, 나치 게슈타포만큼 잔혹한 인권유린 자행”(7/30, 데일리MK)

- 북한 김정은 정권과 인민보안부가 과거 동독의 나치와 비밀경찰인 게슈타포와 같이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음.
- 독일 보훔 루르대학교 형법 박사과정의 찰스 폰 덴코프스키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주최한 ‘독일의 전환기 정의 경험과 북한인권’ 심포지엄에서 “과거 나치 정권의 비밀경찰인 게슈타포와 현재 북한의 인민보안부의 인권침해 및 불법폭력 상황이 매우 비슷한 수준”이라며 현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 실태를 지적했음.
- 이어 그는 “게슈타포가 인종법을 근거로 자행한 고문의 잔혹성과 북한의 인민보안부가 심문과정에서 자행하는 고문과 폭력의 잔혹성의 수준이 유사하다”면서 “인민보안부의 심문과정에서 자행되는 물리적·심리적 폭력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비판했음.
- 그는 최근 인민보안부의 활동에 대해 “몇몇의 일탈 보안원의 행동을 볼 때 폭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최고수준의 반인도범죄를 자행한 게슈타포와 유사한 정도”라고 진단했음.
- 그는 또 “탈북민들의 다수가 보안원이 자행한 인권침해에 분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사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인민보안부의 인권침해 활동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통일과정에서 진실규명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음.

■ 말레이의원 “북에 노동자인권 우려전달”(7/31, 자유아시아방송)

- 말레이시아 야당인 민주행동당(Democratic Action Party:DAP) 옹 키안 밉(Dr. Ong Kian Ming) 의원은 보르네오섬 사라와크 주 지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인권 침해 실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말레이시아 주재 강철 북한대사와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옹 의원은 앞서 말레이시아 의회에 사라와크 주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실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음.

-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가 옹 의원에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광부 40여 명과 건설노동자 240여 명 등 약 290명의 북한 노동자가 사라와크 주에 파견됐음.
- 이 같은 옹 의원의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에 대한 관심은 일본의 인권단체 아시아인권의 가토 켄 대표가 보낸 전자우편에서 시작됐음.
- 가토 대표는 지난해 11월 사라와크 주 탄광 갱도 폭발사고로 북한 광부 3명이 사망하면서, 말레이시아 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현지인들도 기피하는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면서 임금의 대부분을 북한 당국에 착취당하는 북한 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지적했음.
- 옹 의원은 가토 대표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노동자 파견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비밀스런 합의가 있는 지 여부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음.
- 옹 의원은 또 오는 10월 의회가 다시 열리면 사라와크 주 이외 다른 말레이시아 지역에도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지 등에 관해 질문할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북한 노동자의 고용 조건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협약을 위반하는 지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와 관련해 가토 대표는 옹 의원이 북한 대사와의 만남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우려를 강력히 제기하길 희망했음.
- 가토 대표는 북한 노동자들이 현지인도 기피하는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장시간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한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최근 보고서(북한 해외 노동자 현황과 인권실태) 내용을 강조했다.

3. 탈북자

- 유엔, 캐나다에 탈북자 등에 적용되는 난민보호법 재검토 권고(7/25, 미국의소리)
 -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을 담당하는 인권위원회, 일명 자유권규약위원회가 23일 캐나다가 제출한 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 위원회는 발표문에서 난민 신청을 한 탈북자 등에 적용되는 캐나다 난민보호법 일부 조항에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출신지정국 국적의 개인들의 경우 1차 심사에서 난민 신청이 거부되면 난민항소부에 항소할 수 없고, 다만 연방법원의 법률적 검토만 받도록 한 조항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임.
- 실제로 난민 항소부는 새로운 증거를 허용하는 등 난민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반면, 연방법원은 1차 심사 절차가 합리적이었는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난민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임.
-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2월 난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출신지정국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제도는 일반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이 보장된 나라 출신자들이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한국 등 42개 나라에 적용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을 거쳐 캐나다로 들어가 난민 신청을 한 탈북자들이 난민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음.
- 게다가 1차 심사에서 거부된 뒤에 난민항소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게 됐음.
- 유엔 인권이사회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출신지정국 국적의 난민 신청자들이 난민항소부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난민보호법을 재검토할 것을 캐나다 정부에 권고했음.

4. 이산가족

- 한국 통일부 장관 “추석 전 이산가족 상봉 실현 위해 최선”(7/28, 미국의소리)
 - 한국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남북의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나 회포를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홍 장관은 26일 한국 KBS방송의 ‘일요진단’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 홍 장관의 이 발언은 지난해 2월 이후 중단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를 위한 남북 간 회담을 공식적으로 재의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됨.
 -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상봉은 한국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인 만큼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 홍용표 장관은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 문제의 경우 5.24 대북 제재 조치와 별개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홍 장관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라며 남북이 만나 대화를 통해 관광 재개를 위한 방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관심사안인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한국 정부가 언제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홍 장관은 북한이 원하는 현안과 한국이 중시하는 현안들을 고위급 접촉이든 실무회담 형식이든 만나서 풀어야 한다며 남북대화에 호응할 것을 북한에 거듭 촉구했음.
- 남북정상회담 추진 가능성과 관련해서 정상회담이 이뤄지려면 사전 준비와 그만큼의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이를 위해서라도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 홍 장관은 또 최근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개성공단에 대한 남북 간 인식 차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개성공단이 북측 지역에 있어 북한의 법체계를 따라야 한다는 북한과 남북 간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이 만들어진 만큼 남북 간 합의가 북한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한국의 입장이 맞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임.

5. 남북자

- 특이동향 없음.

6. 국군포로

- “국군포로 등 남북자 문제해결 위해 우방과 공조해야”(7/29, 연합뉴스)
 - 6·25전쟁 때 납북된 국군포로와 전시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참전 우방과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 조성훈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광복 70주년 기념 연속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 조 연구위원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2년이 지났지만, 학계에서 5만~6만 명으로 추산하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미해결 상태”라며 “고립적인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호소는 한계가 있는 만큼, 6·25전쟁 참전으로 실종자

- 문제가 남아있는 우방과 공동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 연구위원은 이어 “북한은 1951년 교환 포로 명단 통보 이전에 국군포로를 임의로 자체 심사해 북한군·북한주민으로 편입시키고 억류하기도 했다”며 “이들 가운데 시베리아로 1만 2천여 명이 이송되었다는 주장 등도 있는 만큼 중국·러시아에도 관련 자료공개와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토론자로 참여한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국군포로·전시납북자의 생사 확인과 송환은 자국민 보호 및 국가의 도리 이행차원에서 우선하여 협의·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납북자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최은석 통일교육원 교수도 토론에서 “민족분단과 전쟁의 희생자인 전시납북자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라며 “적십자회담을 통한 생사확인, 상봉, 고향방문, 송환 등 단계별 접근을 시도하며 기존 이산가족 문제해결의 틀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7. 대북지원

- 영국 NGO, 북한 장애아 출생 예방 사업 추진(7/30, 미국의소리)
 - 북한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영국의 민간단체 ‘두라 인터내셔널’이 북한에서 장애예방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두라 인터내셔널의 이석희 목사는 지난달 방북해 북한의 ‘조선장애자보호연맹’과 산생기 여성들과 임신부들에게 모체와 태아에 필요한 필수영양소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 이 목사는 북한에서 장애신산아(장애신생아) 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시한 장애예방 사항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강원도 원산시 등 4개 지역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해 임신부와 산생기 여성 5천여 명에게 엽산과 철, 비타민 등을 첨가한 빵과 과자를 생산해 매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엽산은 태아의 건강한 성장에 중요한 필수영양소로, 임신 초기에 엽산이 부족하면 신경관 결손과 심장기형 등 태아의 척추와 신경계에 선천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 세계보건기구는 엽산이 태아의 신경관 결손 발생을 50% 이상 감소시킨다는 연구

- 결과에 따라 산생기 여성과 임신부에게 하루 0.4mg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는 또 임신부들이 철을 하루 60mg 복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임신부가 철이 부족하면 조산과 저체중아 출산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임.
- 이 목사는 북한의 임신부와 산생기 여성들에게 제공될 빵과 과자가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식품 규격에 맞게 개발, 생산될 것이라고 말했음.
- 이번 사업은 기금이 확보되고 기술적인 준비가 끝나는 대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시작할 것이라고 이 목사는 전했다.
- 두라 인터내셔널은 지난 2012년 런던장애인올림픽에 참석한 북한 선수단을 만난 것을 계기로 북한의 장애 학생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음.
- 지난 2월 말과 3월 초에는 북한의 장애 학생들과 장애인연맹 관계자들을 초청해 영국과 프랑스에서 예술공연과 토론회를 개최했고, 최근에는 평양에 장애인들을 위한 디자인학교 설립 계획을 발표했음.

■ 미 NGO, 이달 말 북 어린이에 식량지원(7/31,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대북 지원단체인 ‘달라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8월 3째주에 강냉이 60t과 밀국수 10t이 중국 단둥에서 북한에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음.
- 이 단체의 관계자는 강냉이와 밀국수를 원산 도 인민병원과 중등학교, 초등학교, 고아원, 문천의 중등학교 등 다섯 군데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달라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8월 23일께 북한에 직접 들어가, 약 일주일간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또 이번 방북에서 강냉이, 밀 등 다양하게 하고 있는 대북 지원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 지도 논의할 것이라고 이 단체는 밝혔다.
- 한편, 북한에 전달된 강냉이는 원산의 국수공장으로 전달돼 강냉이 국수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 원산 국수공장에서는 매달 10t씩 강냉이 국수가 만들어져 수혜 대상 어린이들이 지원된다는 설명임.
- 이 밖에도 이 단체의 관계자는 이번 대북 지원 시 의료팀도 함께 가도록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고 말했음.

8. 북한동향

- ‘北인권백서 2015’ 관련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은 어리석은 체제통일야망의 집중적 표현’이라며 ‘남조선 괴뢰들은 체제통일의 개꿈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주장(7.28, 중앙통신·노동신문/인권모략꾼들은 개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 【외무성 대변인 중통기자 문답(7.29)】 美 국무부의 ‘2015년 인신매매 보고서’(北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발표 관련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 표현’이라며 ‘우리(北)의 제도전복을 노린 미국의 적대의도가 노골화 될수록 선군정치와 병진노선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주장(7.29, 중앙통신)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